

세계경제위기, 멕시코 경제의 대응

후안 까를로스 모레노-브릿*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멕시코의 경제는 라틴아메리카의 여타 국가에 비해 세계경제위기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식적인 추계에 의하면 2009년 멕시코의 국민총생산은 1~2%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고용 부문에서 감소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반면에, JP모건과 같은 평가기관에서는 총생산 감소가 4%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고에서는 경제위기로 인한 예측 가능한 영향력을 정량적 측면에서 전망하는 대신, 1990년대 멕시코의 체제개혁을 통해 이루어진 성장중심주의의 영향력 평가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현재로서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멕시코 정부가 실시한 다양한 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량적 측면의 예측은 아직은 불가피하게 불확실하다. 예를 들어, 재정적자 및 인플레이션의 통제는 경기 조정 정책을 적용하는 데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의 취약성과 은행 제도의 허약함으로 인해 위기 대처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다.

[Economía/ Crecimiento/ Reforma/ Crisis internacional/ México;
경제/ 성장/ 개혁/ 국제경제위기/ 멕시코]

서 론

세계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래 가장 최악이라 할 수 있는 극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이는 바로 최근인 2007년, 은행권에 대한 부정

* 중남미 및 카리브 경제위원회(la Comisión Económica para América Latina y el Caribe)의 멕시코에 있는 소지역 본부(la Sede Subregional)의 연구 코디네이터.

절한 규제와 민간부문에서의 과도한 대출, 국제 수지 불균형의 증대 등의 맥락에 의한 미국의 담보대출 시장의 위기 증대에서 발생하였다. 이는 결국 금융 위기를 촉발시켰으며, 세계경제 전반에 매우 심각하고 장기간에 걸친 반향을 일으켰다. 실제로, 금융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인 서브프라임 시장의 붕괴가 미국 뿐 아니라 여러 국가의 주요 금융 기관의 도산, 급격한 신용 경색, 증권시장의 폭락과 불안정성, 외환시장의 가변성 등에까지 그 파장이 미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금융대란은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중소기업체들에게도 그 파장이 이르렀으며, 무역 및 투자, 고용의 감소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미국의 국민소득은 이미 몇 달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고, 2009년에는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경기후퇴가 나타날 것이라는 데 모두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한편, 실업률은 최근 수십 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위기로 미국에서는 3백 60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 2009년 1월에만 50만 명 이상이 실직하였으며, 이로 인해 실업률은 약 7.6%까지 상승하였다. 이는 199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선진 세계 뿐 아니라 개발도상 세계에 이르는 모든 국가들이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고통 받고 있다. 2008년 4사분기 이후 선진 경제는 생산과 고용 수준에서의 감소 혹은 하강세를 기록하고 있다. 개발도상 경제들은 전반적으로 생산 활동과 공식부문 고용에서 급작스런 성장 둔화를 맞고 있으며, 일부국가에서는 절대적 수준에서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¹⁾ 국제 금융기관들과 분석기관들은 세계경제의 부정적인 상황이 2009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2010년의 후반

1) Banco de México, "Posición de deuda externa bruta. Clasificación por residencia. Periodo jul-sep 2008," Saldos, www.banxico.org.mx/tipo/estadisticas/infogeneral/divulgacionInformacion/FMI/fmi.html, 21/2/2009.

기에는 점진적인 회복세가 시작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본고를 집필하고 있는 현재 시점(2009년 2월)에서 IMF, OECD, UN 등은 2009년에 간신히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예측들은 매우 불투명한 것들로, 산업 잠재력의 증진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이 선택될 것인지, 특히 미국의 신정부가 향후 어떠한 전략을 내놓을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불안정성을 시정하고 금융 붕괴를 방지하며 세계경제의 추락의 고리를 끊을 능력이 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고려하는 데에 신중해야 한다.

실질적인 위기는 세계 각 지역에 각기 다른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시아가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이고, 라틴아메리카 또한 상당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지만,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주요 원자재 수출가격의 앙등에 의해 성장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무역 및 여타 분야를 비롯하여 미국과 직접적인 연계를 유지하고 있는 멕시코가 가장 큰 영향을 받으리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로 2008년 멕시코의 경제는 경제활동율의 둔화를 나타내었는데, 지난 4사분기 실질 국민소득은 이전 년도에 비해 1.8% 감소하였고, 총급여와 평균수입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으며,²⁾ 소비자 신용지수 또한 역사상 최저로 감소하였다. 멕시코 사회보장공단(IMSS)에 의하면 공식부문의 고용 규모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월 사이 1,460만 명에서 1,410만 명으로 축소되었다. 그와 함께 전국 실업률도 5%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³⁾ 한편, 2008년 12월 제조업 부문의 생산과 고용은 2007년 12월의 수치와 비교하여 각각 6.6%, 4.7% 낮아진 반면, 이 분야의 전국 실업률은 5%에 이르러 지난 10년간 가장 높

2) Banco de México, ob. cit.

3)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y Geografía: Encuesta Nacional de Ocupación y Empleo. Población de 14 años y más, México, 2009.

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더불어 멕시코 주식시장의 가격과 지수는 2월 현재 17,752 포인트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2007년 10월 지수의 절반 정도에 머무는 것이다. 환율의 경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지여서 2월 현재 1달러당 페소가격은 15.30페소까지 상승하였으며, 이는 2008년 8월에 비해 40% 이상 평가 절하된 것이다.

2월 재정부와 중앙은행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09년 멕시코 경제는 실질 국내총소득에서 1%에서 2% 사이의 감소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정부 분야에서 예측한 바에 의하면 감소치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JP모건은 4% 정도의 감소를 예견하고 있다. 고용 부문의 감소 규모에 관해서는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15만에서 80만개의 순고용 감소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 및 민간 부문의 예측 모두 고용의 규모와 질의 악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러한 예측들은 또한 향후 수 개월간 세계경제의 악화, 특히 미국 경제의 악화에 동의하고 있으며, 멕시코 정부가 다양한 측면에서 세계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침체가 언제까지 지속되고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 것이지, 멕시코 정부에 의해 발표된 응급조치 및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불확실하므로 현재로서는 멕시코의 경우에 상기한 전망의 현실성을 반박하거나 대안을 내놓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분석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실질적인 위기에 맞선 현재 멕시코의 경제구조는 어떠한가? 멕시코 경제구조의 주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국제경제위기의 파장은 어떠한 경로를 거쳐,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멕시코 경제에 전이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정부의 대응은 무엇이었으며, 얼마나 적절한 효과를 나타내었는가? 경제위기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으

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멕시코 경제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동원 가능한 방법 및 정치 경제적 조언은 무엇인가? 본고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펼 것이다.

구조 개혁의 장점과 단점

멕시코 경제의 실질적인 장점과 약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구조가 어떠한지, 그리고 1980년대 이후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혁의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1980년대는 국제 외채위기가 촉발된 시기로, 수입대체산업화와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개입에 바탕을 둔 전통적인 발전방식을 포기한 시기이다. 이러한 과정의 목적은 수출과 민간 투자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경제의 공적 부문에 대한 정부의 개입 축소와 함께 후속 정부들에 의해 확대된 이러한 개혁은 멕시코 경제를 외국과의 교역 및 투자에 대해 더욱 개방적인 중규모의 경제로 바꿔 놓았다.

개혁은 세 개의 주요 축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으로 양등하는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고 재정적자를 교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81년과 1986년 원유시장의 붕괴와 외채위기 때문에 양자는 상당히 불안정해졌다. 안정화 정책은 공공 지출 감소와 경제연대협약이라는 이례적인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졌다. 경제연대협약은 환율정책과 명목 최저임금 및 기본품목 가격의 조화로운 통제를 포괄하는 노·사·정 합의를 말한다.

개혁은 인플레이션 및 재정적자에 대한 대처 뿐 아니라 멕시코 경제구조의 변화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었다. 우선 국내의 상품 및 금융, 투자 시

장을 외국과의 경쟁에 대해 개방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수입 허가제와 다중 관세 및 관세를 통한 규제에 바탕을 둔 보호정책을 철폐하였다. 또한, 공공 경제 부문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과감하게 축소하였다. 다음 장은 이러한 근본적인 개혁에 대하여 다루었다.

무역 개방 및 외국인 투자 허용

보호주의 제도의 철폐는 1986년 GATT협약 가입 및 미국, 캐나다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같은 자유무역과 관련한 국제적인 협약에 서명하면서 진행되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은 1994년 1월 1일 발효되었는데, 이와 함께 역내 무역 및 투자에 관한 모든 관세·비관세 장벽이 향후 15년 내에 거의 철폐하기로 하였다. 이후 멕시코는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유럽연합 등의 지역들과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였다. 비슷한 맥락으로 멕시코는 OECD 및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였다.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기 꽤 오래 전부터 보호무역제도를 일방적인 방식으로 해체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처음에는 완만한 속도로 시작하였으나 이후 빠른 속도로 수입에 대한 사전 허가 요구를 철폐하였으며, 관세 장벽의 수와 범위를 축소시켰고, 일부 수입품과 수출품에 대해 적용되던 고시 가격 체제를 철폐하였다. 실제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기 수년 전인 1988년 말 이래, 멕시코 경제는 이미 외국과의 경쟁에 대하여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경제체제였던 것이다.⁴⁾ 북미자유무역협정의 발효 바로 직전, 수입의 20%만이 사전 허가제의 적용을 받

4) Andriaan Ten Kate y Fernando de Mateo, "Apertura comercial y estructura de la protección en México. Un análisis de la relación entre ambas," in *Comercio Exterior*, Vol.39, No.6, 6/1989.

았고, 최대 관세율은 25%였으며, 평균 관세율은 11.5%에 그쳤다.⁵⁾

북미자유무역협정으로 옥수수, 자동차 및 운송 기계 등과 같은 일부 품목만이 한시적으로 확실한 무역 보호 조치를 받았다. 한편, 이 협정에 대한 추가 조항으로 외국 자본의 자유로운 유입을 비롯하여 환경 및 노동에 관한 몇몇 기준에 대한 협력안이 삽입되었다.

멕시코의 입장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세 가지 목적을 갖는 것이었다. 첫 번째는 외국과의 최대한 경쟁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을 견인차로 하여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동인을 멕시코 경제에 제공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경제개혁 과정에 대한 불가역성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외국자본 투자의 자유화는 무역 개방에 비해 느린 속도로 이루어졌지만 무역 개방과 마찬가지로 견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973년 외국자본투자법에 대한 일련의 수정을 통하여 제조업 분야 전반에서의 외국 자본의 참여에 관한 상한선과 규제의 철폐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노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멕시코 투자 진흥과 해외 자본 규제를 위한 법률 규정을 들 수 있다. 경제 개방에 매우 부합하는 이들 규정으로 제조업 분야에 대한 해외 자본 투자의 법률적 상한선이 철폐되었다.

이후 1993년 12월 북미자유무역협정에 의거한 새로운 해외 자본 투자법이 공포되었는데, 이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의 발효를 바로 앞둔 시점이었었다. 이 새로운 법안은 국민총생산의 81%에 해당하는 생산 활동 분야에

5) Aaron Tornel y Gerardo Esquivel, "The Political Economy of Mexico's Entry into Nafta," in Takatoshi Ito y Anne O. Krueger (eds.), *Regionalism Versus Multilateral Trade Arrangements*, NBER-East Asia Seminar on Economics 6,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1997.

외국 자본이 높은 비율로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이들 개방 분야에는 케이블 TV를 비롯하여 해운과 육상을 통한 여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 부문까지도 포함되었다. 이 법률에는 또한 석유화학 분야, 자동차 부품 및 조립 분야에 대한 제한까지도 포함된다. 기초 석유 분야와 무기 및 폭약 생산 분야를 제외한 모든 제조업 분야가 외국 자본의 투자에 대해 전면적으로 개방되었다. 개방을 상징하는 가장 확실한 지표는 1994년 경제위기 시기 시행되었던 상업은행 제도의 복원으로, 해외자본이 유형 및 상한선의 제한 없이 은행 부문으로 자유로이 유입될 수 있게 되었다.

경제 분야에서의 공공 부문 개입의 축소

무역보호제도 및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의 철폐는 경제의 공공 부문에 대한 개입과 통제의 범위에 대한 강력한 축소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공기업의 민영화와 산업 정책의 철폐가 이루어졌다. 구조 개혁의 핵심적인 요소였던 공기업의 민영화는 민간 부문 활동으로 이익의 상당부분을 이전시키고자 한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었으며, 부실 공기업으로 인해 늘어나던 재정 적자를 축소시키고자 한 것이 차후 목적이었다.⁶⁾

공기업의 매각은 크게 두 시기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1980년대 중반으로,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지 못하던 중소 규모의 기업 200여 개가 이 시기에 매각되었다. 두 번째는 1989년부터 1996년 사이로,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대규모 기업들이 이 시기에 매각되었다. 1982년 1,155개에 달하던 공기업 중 1,000개 이상이 두 시기를 통하여 민간 부분으로 편입되었다. 이후 철도 기업, 항만 운영 및 기타

6) Jaime Ros, "Mexico's Trade and Industrialization Experience since 1960: a Reconsideration of Past Policies and Assessment of Current Reforms," in Gerald Helleiner (ed.), *Trade Policy and Industrialization in Turbulent Times*, Londres-Nueva York, 1994.

서비스 분야를 포함하여 몇몇 기업이 추가로 민영화되었다. 2008년에 재개된 에너지 분야의 개혁에 대한 논의에서도 민영화가 포함되었다. 실제로 기초 석유 분야에 대한 민간 자본의 참여는 강력하게 제한되었지만,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민간 자본 혹은 해외 자본의 참여는 100%까지 허용되었다.

경제에 대한 정부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두 번째 방법은 전통적인 산업 정책을 붕괴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특정 분야에 대한 보조금과 장려정책 대신 소위 '수평적'이라 불리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었는데, 이 정책은 기업의 활동 분야나 종류를 구별하는 대신, 기업체의 크기에 주로 관심을 두어 소규모 및 중규모 기업을 장려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장려 정책은 정부의 지원 및 보조를 배제한 상황에서 시장의 자유로운 운영을 진흥시키고자 하였으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유 관련 법안의 일반적인 틀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새로운 방향은 기업의 국적이나 순이익 창출 능력 등의 기준으로 보조금, 허가 제도, 수행 요건 등의 선별적이고 직접적인 간섭을 하던 관행과 관련된 모든 조항을 폐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GATT와의 규정 조정 과정에서 대부분의 보조금이 사라졌으며, 특별한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즉 재수출을 위해 수입되는 부분에 관해서만 일정 부분의 세금 감면 혜택이 유지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부문별 진흥과는 동떨어진 것이며, 시장의 일반적인 취약성을 보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

개혁의 결과: 인플레이션과 공공 재정

멕시코가 발전의 기준을 바꾸기 위하여 받아들였던 경제 개혁은 공공 재정 적자 문제를 개선하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했다는 면에서는 부정할 수 없는 성과를 내었다. 실제로 공공 지출의 감소, 특히 인프라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인한 것이 주를 이루지만, 재정 수익의 상당 부분을 통하여 정부는 실질적으로 재정적자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공공부문 외채의 상당한 감소가 지속되었다. 2008년 말 외채의 잔고는 560억 달러였는데, 이는 10년 전보다 40% 감소한 것이었고, 국민총생산에 대한 비율 또한 약 6.1%로 1998년보다 15% 정도 낮은 것이었다.

금융 부문의 개선이 지속된 덕에 사회보장시스템의 연금 정책과 관련 되어 발생한 부채를 계산에 넣지 않은 공공 부문의 적자는 이미 수년전부터 국민총생산에 대비 2% 이하 수준을 유지하였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공공 재정 부문의 수지는 초과 잉여를 나타내었다. 이는 정부가 긴축 재정에 관한 정부의 협정을 강화하고, 의회가 ‘예산 및 재정 책임에 관한 연방법(2006년 3월 30일에 관보에 고시되었음)’을 승인함으로써 공공 부문의 지출과 수입 간의 연간 수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 적자가 0이 되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정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비록 2008년 재정 수지의 결산에 대한 Pemex의 투자비를 제외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기준에 관한 조정안이 실현된 것이지만, 이 법은 공공 재정의 경기 조정 정책에 대하여 확실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법은 특수한 거시경제 상황에서는 국민총생산의 1%에 해당하는 적자까지는 재정적 규제 부문에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 재정의 보증은 중기적인 전망에서 보면 공공 예산에서 중

대한 취약성을 유발할 수도 있는 두 가지 우려할만한 요소를 개선하지는 못했다. 그 첫 번째 요소는 낮은 조세 부담률이다. 실제로, 조세 부담률은 국민총생산의 14% 이하 정도로, 이로 인해 멕시코는 OECD 국가 중 조세 부담률이 낮은 국가에 속하고, 라틴아메리카의 비슷한 소득을 나타내는 나라들 대부분보다 낮은 조세 부담률을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 요소는 석유 자본에 대한 지나친 재정 의존도로, 현재 재정 수입 전체의 40% 정도가 석유 부문에서 비롯된 것이다. 석유로 인한 재원은 유동성이 매우 강한 국제 원유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한편,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멕시코의 석유 부존량이 현저하게 감소할 수 있으며, 생산 능력이 감소할 수도 있다. 낮은 조세율과 석유 부문의 높은 의존율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경기 조정 정책의 유지와 확대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정부의 능력과 범위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1980년대 중반 연평균 세 자리 수준으로 치솟았던 인플레이션은 감소 경향을 나타내어 소비자 물가지수는 2000년부터 한 자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안정적인 상황은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 많은 나라들이 원료 및 곡물가의 앙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상황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멕시코 중앙은행은 현재까지 외화의 유동성 부문에서 달러에 대한 폐소화의 환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여 왔고, 이자율 결정에서도 매우 신중한 경향을 보이며, 양자를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을 펴 왔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물가는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되었다.

수출 붐과 무역의 발전

생산의 측면에서 보면, 현재까지 개혁은 무역과 미국에 대한 멕시코의

해외 투자에 가장 집중되어 왔다. 게다가, 대부분 제조업 분야에 한정되지만 수출은 폭발적인 증가를 보여 왔으며, 특히 외국인 직접 투자에서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이러한 수출의 전격적인 확대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1993년 협정이 조인된 이래 2006년까지 제조업 분야의 수출은 평균 10% 이상의 추세로 성장하였다. 이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이다. 이러한 역동적인 성장세에 힘입어 국민총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두 배 이상 증가하여 35%에 이르렀다. 수입 또한 증가하여 국민총생산 대비 국제 무역액의 비율 또한 평균 6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10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비약적인 확대는 정부의 수출 개입에서의 극적인 노선 전환에 힘입어 가능하였으며, 멕시코는 더 이상 탄화수소 부분에서만 이익을 내지는 않게 되었다. 이는 기존에 멕시코 국내에 입지하고 있었거나 혹은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입지한 마길라도라 산업체들, 자동차 부품 공장들, 그리고 증가 추세에 있는 외국계 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 분야의 증대는 자동차 부품, 자동차 조립, 컴퓨터 및 전자 부품 등 일부 산업에서만 집중되어 성장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이라는 틀 내에서 멕시코 수출의 역동성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국가와의 무역에서는 상당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미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한 흑자보다 크다. 실제로, 마길라도라 및 석유 산업 분야에서 발생한 흑자는 다른 국가들과의 공산품 및 원자재, 서비스 등의 무역에서 발생한 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되었다. 다시 말해, 수출 분야의 비약적인 확대로 인해 수입 분야에서의 더욱 괄목할만한 성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기타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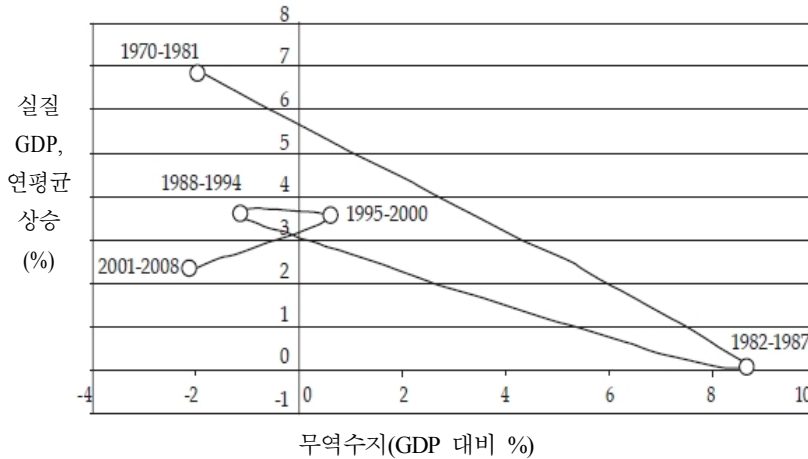
야에서의 수출을 이끌어낼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 분야에서의 역동성은 멕시코 경제에서 상당규모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만한 충분한 견인차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다.

수입 분야에서 불이 나타난 이유 중 하나는 물론 수십 년간의 보호주의 이후 이루어진 무역 개방으로, 이로 인해 멕시코의 소비자들은 외국에서 제조된 상품을 손쉽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실질 환율 평가에 대한 완고한 경향(고평가된 환율 정책)도 또 하나의 이유라 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증대된 수입 중 어느 정도가 수출 기업 및 해외 공급자들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지 알 수 없으며, 국내 공급자들과 제조업자들 간에 수입으로 인해 연계의 단절이 나타났는지도 알 수 없다.

새로운 모델의 한계

<도표 1>을 보면 새로운 수출주도형 경제 모델이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으로서 불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표 1>은 최근 40년간 실질 국민총생산의 증가 경향과 무역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1970년부터 1981년까지 실질 국민총생산은 연평균 7%씩 성장하였고, 무역적자액은 국민총생산액의 2% 정도를 기록하였다. 외채 위기의 정점을 이루었던 1982년부터 1987년 사이, 경제는 정체를 나타내었으나 무역수지는 국민총생산액의 8%에 이르는 흑자를 기록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이후 북미자유무역협정 이전 경제 개혁의 초기, 경제는 연평균 3.5%의 추세로 성장하였으나, 이는 1970년대 성장률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었으며 무역 적자의 추세는 당시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도표 1> 무역수지와 경제 성장, 1970-2008



출처: Inegi와 Banco de México의 자료를 바탕으로 가공.

북미자유무역협정 초기 6년간의 경제 성장률과 무역수지는 1995년 위기의 영향으로 역시 비슷한 추이를 나타내었다. 개혁 초기의 약 20년간 멕시코 경제는 1970년대와 비슷한 무역 적자를 나타내었으나, 이후에는 평균적으로는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즉, 오늘날 멕시코 경제는 외화를 적절히 사용하면서 역사적 궤적에 비해서는 매우 완만한 경향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21세기 들어 10년간 멕시코의 경제는 2008년을 제외하고는 외적인 측면에서는 완만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을 주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매우 긍정적인 것이고, 세계경제의 급속한 성장의 산물이며, 자본시장에의 자유로운 접근성과 외환 수지 측면에서의 개선을 동반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석유분야의 수출을 제외하면 무역수지 적자는 총 적자의 네 배 정도가 될 것이라는 사실도 주의하여야 한다.

제한된 경제 성장은 노동력의 성장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고용을 창출할 수 없다는 우려를 낳는다. 여러 측정지표에 의하면 멕시코는 해마다 8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의 고용이 창출되어야 하나, 최근 창출된 고용의 규모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빈곤을 줄이고자 한다면, 고용의 창출규모는 더욱 커져야 한다. 멕시코는 실제로 전 국민의 40%가 빈곤층에 해당되며, 10% 이상의 인구가 극빈층에 해당된다.

개혁에 대한 멕시코 경제의 두 번째 주요한 한계는 고정투자가 빈약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민총생산에 대한 총고정투자액의 비율은 석유 붐이 있었던 시기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1982년부터 1987년까지 외채위기 시기 그 비율은 급락하였다. 이러한 급락의 과정을 거친 이후 고정투자의 회복 추세는 매우 느려져서 현재는 국민총생산액 대비 20% 밖에 되지 않는다. 고정자본의 축적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서 Unctad에서 연평균 경제 성장률 5%를 상회하는 국가들에 권고하는 비중인 25%를 밑돌고 있다.

거시경제 개혁에 대한 투자가 빈약한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첫 번째, 신용 부족이 가장 중대한 이유이다. 이는 1990년대 중반 은행 시스템이 와해된 이후 멕시코 국내 기업의 상당수가 겪고 있는 문제이자, 외국 은행의 국내 은행 시스템 흡수로 누적된 문제이기도 하다. 오늘날 상업 및 주택 분야를 제외하고 오로지 생산 활동을 위해 제공된 신용의 비중은 국민총생산에 대비해서 매우 낮다. 나아가 개발 은행의 취약성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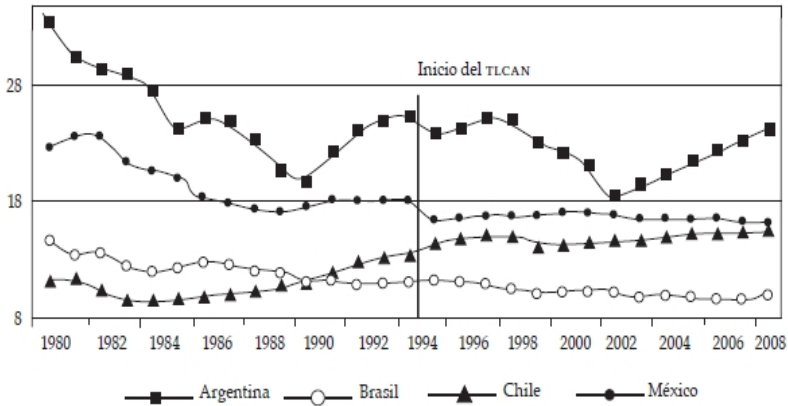
투자의 취약성을 설명하는 두 번째 요소는 재정 적자를 개선시키기 위해 선택된 전략의 결과로 나타난 공공 부문 투자의 축소이며, 이는 사회

기반시설의 취약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산업 진흥 및 특별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취소로 인해 민간 부문 투자 또한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든 통화에 대한 환율의 불안감과 결합하여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환율에 대한 완고한 평가(고평가) 또한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민간자본이 외국에서의 공산품 생산이나 4차 서비스 산업 부문으로 유출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을 차지하고라도, 경제 발전을 유지할 지속적이고 강력한 투자가 부재한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기계 및 설비의 확충 및 현대화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투자의 부재로 인해 생산 부분은 국제 시장 뿐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조차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수출 부문의 비약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의 역동성 부족으로 미국과 멕시코의 1인당 총생산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도표 2>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1982년 석유 호황이 끝난 이후 멕시코 경제의 지체는 더욱 심화되었다. 1987년부터 이어진 멕시코 경제의 안정화 및 거품빼기는 개혁 초기 과정에서 기록된 성장과 더불어 이러한 간격을 완만한 속도로 감소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은 1995년의 위기로 급격히 후퇴하였다. 그때부터 격차는 약 16% 수준에서 고정되었으며, 이러한 격차는 1950년대와 비슷한 것이다. 즉, 50년 이상 격차가 지속된 것이다. 이러한 멕시코의 평균 소득의 지속적인 지체의 결과 미국으로의 이민자가 증가하였다. 지난 10년간의 여러 추정 자료에 의하면, 해마다 40만 명에서 50만 명의 멕시코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고 있다. 이러한 이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노동시장에 대한 압력과 그로 인한 소득의 악화는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심화되었다.

<도표 2> 무역수지와 경제 성장, 1970-2008



출처: 세계은행-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자료를 바탕으로 가공

국제 경제위기로 인한 멕시코경제의 영향

앞 장에서는 개혁에 의한 멕시코 경제 발전의 새로운 기준과 국제 경제로의 편입에 관하여 다루었으며, 정부 개입의 축소 및 자유로운 수출 지향을 통한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점과 단점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세계경제위기가 멕시코 경제 침체에 영향을 이미 주었거나 혹은 앞으로 줄 수 있는 경로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앞서 지적한 취약성들을 악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앞서 설명한 장점 중 어떠한 것들이 위기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 한다.

국제 경제위기의 가장 근본적인 영향은 외부 유입 자본의 축소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금융 부문의 붕괴로 유발된 미국 및 여타 선진국들의 신용 경색으로 인하여 멕시코 정부 및 다른 개발도상국은 민간 기업과 마찬가지로 비공식적인 자본을 고려하여야 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멕시코의 경우 이러한 긴축상황은 외국 자본의 도움으로 세계 시장에 진입 하였던 대기업들에게 특히 영향을 미쳤다.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이러한 기업 중 상당수가 단기적으로 이자나 원금의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멕시코 외환 시장에 일시 적이나 심각한 압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멕시코 외채의 약 55%가 민간부분에서 발생한 것임을 상기하여야 한다.⁷⁾

주요 지표에 의하면, 이미 10년 전부터 멕시코의 은행권의 대부분은 국제적인 거대 은행들이 소유한 매우 수익성이 높은 자회사인 상태이다. 이 은행들 중에는 심각한 재정 상태에 있는 씨티그룹도 포함되어 있다. 이 은행들이 금융 위기에 맞서 자회사들이 취해야 할 전략으로서 어떠한 것을 내놓을 수 있을까? 여분의 자본을 바깥으로 시급하게 송금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멕시코 자회사들의 중계 업무는 어느 정도까지 압력을 받을까?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답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2009년 2월 중순 경 씨티그룹이 재정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하여 멕시코 내 자회사인 바나맥스(Banamex)를 매각할 것이라는 소문을 주목하여야 한다.

세계 금융시장에서의 상황 악화와 위험률 증가로 멕시코의 해외 신규 자금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이 심화되고 지속된다면 투자 계획에 대한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외환자금에 대한 높은 압력을 가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한편, 이러한 긴축상황은 국제 혹은 국내 금융기관들의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

7) Banco de México, ob. cit.

에 관하여 멕시코는 IMF의 특별금융자금 300억 달러에 대한 긴급 지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며, 이는 국가 외환 보유고의 35%에 이르는 규모이다.

금융 위기는 신용 이외에도 외국인 직접투자 뿐 아니라 단기 자금의 유입에도 영향을 미쳤다. 초기에는 전 세계적인 불안감, 수요의 급감, 그리고 금융 제한 등으로 인해 기존 생산 설비의 확장이나 현대화와 같은 새로운 프로젝트 등에 대한 투자 동기가 감소되었다. 실제로 2008년 외국인 직접 투자는 전년도 대비 30%나 감소하였다. 단기 유동 자금은 투기성 압력에 의해 갑작스레 변동할 수 있으며, 미 재무성 채권과 같이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훨씬 안전한 투자처를 찾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금융의 이러한 속성은 생산 활동과 노동 분야를 무기력하게 함으로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게다가, 멕시코 경제는 세계 무역의 감소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미국 및 주요 수출국들의 경제 침체로 인해 멕시코 수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여러 산업 분야 중에서 가장 복잡하게 영향을 받게 될 분야는 자동차 부문 및 제조업 전반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업의 타격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09년 1월 현재 자동차와 관광 분야는 경제 침체의 영향을 받아 자동차 부문 수출의 56%가 감소하였으며, 관광 부문의 매출 또한 10% 정도 감소하였다. 게다가, 일부 국가에서 내세우고 있는 보호주의 경향이 공고화되는 추세이며,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멕시코의 일부 공장을 한시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하여 이로 인한 영향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이 필요한 또 다른 경제 분야는 석유 분야이다. 석유 분야는 재정 수입 면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주요한 외화

수입원이다. 2009년 2월 17일 치콘떼펙에서 1,390억 배럴의 원유 매장이 확인되어 공표되었으며, 이로 인해 멕시코는 확인된 매장량으로는 세계 3위의 산유국이 되었다.⁸⁾ 그러나 이번 달 말 멕시코산 원유의 가격은 배럴당 40.7달러로 여덟 달 전인 2008년 6월 130달러의 겨우 1/3 수준이라는 것을 환기하여야 한다.

수출의 총체적인 약점은 수입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 무역 적자의 누적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마킬라도라에 투입되는 중간재의 한시적인 중요성이 자동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다. 소비재와 투자재로 인한 무역수지는 경기 침체의 시기에는 국민총생산 대비 더욱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2008년 무역수지 적자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국민총생산의 2%에 이르렀다. 국민총생산의 감소와 달러에 대한 페소화의 50% 가까운 평가 절하로 수입품 가격의 상당한 인상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러한 적자가 2009년에는 적은 양이나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경제의 침체와 그로 인한 고용의 감소, 이민 노동자들의 임금 감소로 인해 이민자들에 의한 송금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외화의 유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족에 의한 송금 유입의 감소는 멕시코 일부 지역의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실제로 2008년 멕시코로의 송금은 2007년에 비해 3.6%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위기의 세 번째 영향력은 소위 '다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속성을 지닌 통합적인 것으로, 경제위기의 초기에는 그 충격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이후 다른 계층의 위기로 인해 소득과 소비

8) Noé Cruz Serrano, "Riqueza petrolera hasta 2080," in *El Universal*, 17/2/2009, www.el-universal.com.mx/finanzas/69237.html

력에 영향력을 받는 계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력은 신용 경색과 외국인 투자 감소, 자본 유입의 감소 등으로 인해 나타나게 된다. 즉, 첫 번째 단계에서는 수출이 감소하고, 연이은 단계에서는 국내 시장의 고용과 수입 부분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파장은 계속 진행되면서 초기의 영향력을 넘어선 그 이상의 것이 된다. 이러한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추가적인 파장은 금융 수입 및 공공 재정에까지 미치게 된다.

앞의 단락들에서는 국제 경제위기가 멕시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경로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고의 초반에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이미 경제위기의 영향 하에 있는 분야라 하더라도 2009년과 2010년 그 영향의 정도가 어떠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모든 경우, 거시경제 및 사회 보호 정책의 계획과 실행을 위하여 이러한 경로들은 분명 신용 있는 기관에 의해 모니터링 될 것이다.

가능한 영향력들을 분석해 보면, 이러한 여러 측면들이 본고에서 밝힌 바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심화시킬 수 있음은 확실하다. 경제위기는 수지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즉,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외부 부문의 불충분성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미 충분히 낮은 세율과 원유 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율로 인한 영향력을 타개하기 위하여 긴급히 금융정책을 보정하거나 경기를 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 재정의 적자 확대 저지를 언급한 연방법은 경제 및 사회 전반의 악화를 막기 위하여 행해진 조치 그 이상의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경제위기는 은행 중계 시스템의 근본적인 결함과 취약성을 드러내었으며, 특히 생산을 위한 신용 측면의 취약성을 드러내었다.

한편, 앞서 지적한 일부 강점들은 실질적인 호기에 그 중요성을 회복

할 것이다. 이전 시기 발생한 과도한 외채와 인플레이션의 폭등, 그리고 거대한 재정 적자를 오래 전에 해결하였기에 금융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공지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그 방안이 반드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한 압력이나 예산안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로 인해 경기조정 정책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는 공공재정의 도입에 있어 실용적인 태도를 받아들인다는 조건하에서 그러하며, 예산 책임 법안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예산의 지속적인 균형 유지 원칙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환 및 재정에 관하여 다루자면, 외환 시장에 대한 멕시코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보완된 실질적인 유동 정책으로 무역 물품의 상대적인 가격과 외환 가격을 신속히 수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다른 시기에 나타났던, 그리고 현재 다른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실질적인 고정평가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유연성은 투기성 이자를 억제하고 고용을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마지막 속고: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경제정책 방안

미국의 금융 위기에 대처하여 멕시코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 주요한 발표에서는 국가의 회복 가능성의 중요성을 축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 멕시코 경제의 역동성으로 인해 여타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상황으로부터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으며, 멕시코 거시경제의 견고함으로 인해 모든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었다고 논의되었다. 그러나 외부의 위기가 심화되어감에 따라 공식적인 입장 또한 경계에서 우려로 변화하였다. 그로 인하여 정부는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축소하는 방향의 경제 정책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부는 초기부터 외부 위기에 대처하는 종합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대신에 일련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명문화할 필요 없는 의안들을 연속적으로 통지하고 공표하는 전략을 통하여 대응하여 왔다.

첫 번째 사례는 2008년 공표된 ‘사회기반 시설에 관한 국가 기금’으로 이는 10년간에 걸친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내수 시장의 재활성화를 의도한 것이다. 최근 발표된 방안 중에는 2008년 8월 발표된 성장 및 고용 촉진 프로그램도 포함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여러 상황에 대한 다양한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공공 지출의 확대, 재편성, 유연화 등을 포함하는데, 공공 지출은 대부분 사회기반 시설에 할당된다. 이 프로그램에는 정유시설의 건설,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확대, 국내 기업 설립 및 해외무역 절차의 간소화 등도 포함된다.

2009년 1월 고용 및 일상 경제를 위한 국가 협약이 공표되었는데, 이는 연방 정부, 주 정부, 입법부, 다수의 사회 조직체, 기업, 노동자 부문간의 일련의 합의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 중에는 한시적인 고용 증대 프로그램을 위한 재정 확대, 가솔린 가격의 동결 및 전기, LPG 요금의 인하에 더하여 Nafinsa 및 Bancomext 등과 같은 개발은행에 의한 인가를 조건으로 하는 직접 융자의 확대 등이 포함된다. 지난 2월 10일 칼데론 대통령은 의회에 두 가지 안건을 상정하였는데, 이 안건들은 멕시코 사회보장공단(IMSS)과 노동자국민주택기금(Infonavit)의 법을 개정함으로써 공식부문의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누구든 Infonavit에 계정을 개설할 수 있게 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몇 주 후, 의회는 실질적인 회기 기간에 논의된다는 조건으로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일련의 제안서를 내놓았다. 이 중에는 멕시코 중앙은행의 위임통치(명령)를 확대하는 제안서도 들어 있었는데, 이는 장기적인 측면

에서 멕시코 경제를 성장 가능한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의도로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들의 대부분은 추가적인 재원과 정치권의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선의의 목적에만 그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일련의 프로그램들은 이미 공포되었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 정도 착수가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될지는 불확실하며, 미래에 추가적인 의안으로 보완이 지속될지도 아직 알 수 없다. 재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PICE와 (...) 등의 조약 등 2009년의 경기 부양 정책은 국민총생산의 1.8%에 이르는 금융 부문에 자극을 준다”고 한다.⁹⁾ 한편, 다른 추정에 의하면 정부에 의해 제안된 특별 금융 종합정책이 국민총생산의 3%에 달한다고 한다.¹⁰⁾ 이러한 지표들은 브라질과 중국 정부가 비슷한 항목에 대하여 목표한 수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만, 거시경제적인 정책의 경기 부양책이 재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공식적인 합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실제로 재무부 장관은 경제 정책의 실행에 있어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은 고용 촉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¹¹⁾ 어느 정도의 추가 재원이 이러한 노력에 배당될지, 그리고 이미 발표된 프로그램들을 추진하는 정부의 능력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주시해야 할 것이다. 이 점이 경제위기가 고용과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조치의 결과를 결정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든, 이러한 노력에 있어서 정부는 상당량의 외채 확보의

9) Agustín Carstens, "Discurso en el Foro de Propuestas y Compromisos México Ante La Crisis: ¿Qué Hacer Para Crecer?" H. Congreso de la Unión, Castillo de Chapultepec, México, DF, 2009. 1. 27.

10) "Economic Policy in Mexico: Damage Control. A Latin American Country softens Recession with Counter-Cyclical Policies," in *The Economist*, 22/1/2009.

11) A. Carstens, ob. cit.

방법 등과 같은 추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오늘날 추가 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외채 잔고를 낮추고, 금융 상황을 통제하며, 인플레이션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다. 사회 영역에서는 특히 경제위기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강하게 느끼는 도시민들에게는 Oportunidades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보호대책이 확대될 것이다.

최근 몇 십년간 라틴아메리카 경제들, 특히 멕시코 경제의 번영의 시기는 무역 조건의 극적인 호전과 해외 자본의 대량 유입에 의한 외부 자본의 일시적인 풍요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러한 번영의 시기에 외부에서 유입된 자본을 장기적인 측면의 경제 발전에 대한 제한 요소가 되는 모든 구조적 약점을 완화시킬 수 있는 투자재원으로서, 그리고 사회적 지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특별 재원으로서 전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재원은 지역별로 일정한 법칙을 통하여 현명하게 사용되었다기 보다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었다. 결국, 이러한 외래 자본은 장기적인 측면의 국제 경쟁력 강화나 성장 가능성의 확대에 사용되지 못하고 낭비되고 말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외부로부터의 부정적이고 심각한 충격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경제위기의 시기에는 라틴아메리카 경제들의 구조적 한계가 극명히 드러났으며, 그러한 한계들로는 성장에 대한 외적인 제한, 자본 유입의 불충분성과 취약성, 금융 중재 제도의 근본적인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빈곤과 불평등을 퇴치할 수 있는 양질의 고용을 충분히 창출해 낼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었을 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멕시코 정부에 의해 채택된 방법들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 때에 빈곤과 불평등의 근원을 퇴치할 수 있어야 하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제 및 사회 발

전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안들에는 원유 수입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축소시키고, 공공부문의 수입을 본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재정 정책을 모색하고, 나아가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을 개선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측면의 공공 투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정 수입의 개선은 멕시코 경제를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성장과정으로 편입시키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 점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경제위기의 영향력을 효율적으로 완충시키고자 하는 거시경제적인 경기 조정 정책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2008년 말부터 시작된 어려운 상황은 멕시코의 노동 시장에 악재가 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2009년에 더욱 심해질 것이 확실하므로 노동부문의 개혁에 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임금 및 상여금의 감축과 노동 보호 관련 조항의 축소를 통한 노동비용의 인하로서 이해될 수 있는 노동부문의 유연성 증대에 대한 압력에 대한 응답으로서 노·사·정 협약으로 논의되었던 정책들을 다시 재정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멕시코가 저임금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도 없으며,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은 명확하다. 오히려 장기적인 노동 전략에서 멕시코가 필요로 하는 것은 노동력을 양성하고 능력을 혼합하는 데에 필요한 유연성을 획득하는 방향으로 양질의 고용을 실행하는 것, 즉 더욱 양질의 노동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노동법의 기본 구조를 제고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에 힘이 될 것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이 당장의 시급한 문제들과 결합되어 작용할 수 있는지 주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실질 예산법에서의 변화를 촉구하고, 칠레에서 행하였던 방법과 같은 전략을 택하는 것을 권고해 볼 수 있다. 칠레는 재정 균형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멕시코 정부

도 특히 기업 부문의 투자와 활동에 대한 은행의 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금융 중계를 확대시키고 개선시킬 수 있는 전략을 진행시켜야만 한다. 이러한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요소로는 개발은행들의 강화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이미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 프로그램으로서 정부에서 내놓은 조치들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으나, 더욱 체계적이고 결정적인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 다른 중요한 점은, 프란시스코 수아레스 다 빌라가 제시한 바와 같이 멕시코 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민간 은행들이 국가발전계획이라는 특수한 목적의 수행에 일조하는 방향으로 그들의 금융 중계 전략(대부분이 신용의 할당에 관한 것이지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 중 일부는 은행 감독의 자치권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국가발전이라는 거대한 목적을 향한 민간 은행들의 금융조정 과정의 이러한 전략적 재조정은 다양한 공공정책을 통하여 이어져 갈 수 있다. 이러한 공공정책들에 금융 제도의 기관들에 관한 화폐 자치권의 허용 및 규제 능력에 관한 것들도 포함된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는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적 정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는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성장 유지를 목적으로 할 때 멕시코 경제에서의 정부와 시장의 역할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특히, 재원의 분배에 있어서 공공 부문의 규제와 간섭의 범위와 형태의 변화를 의미한다. 경제위기에 대처하고 고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혹은 없을지는 그 대답이 의심스러우며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김희순 번역)

참고 문헌

- Comisión Económica para América Latina y el Caribe (Cepal), *Balance preliminar de las economías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2008*, LC/G.2401-P, Cepal, Santiago de Chile, 2008.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Mexico Country Report January 2009," EIU, 2009.
- "Entrevista con Jaime Serra Puche: La crisis y el Mercado" in *Este País*, No.215, 2/2009.
- Leyva, Jeanette, Rivelino Rueda e Isabel Becerril, "Lanza el Congreso propuestas de emergencia contra la crisis," in *El Universal*, 19/2/2009.
- Moreno-Brid, Juan Carlos, "Essays on Economic Growth and the Balance-of-Payments Constraint,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ase of Mexico," disertación de PhD, Facultad de Economía y Política, Universidad de Cambridge, Reino Unido, 2001.
- Moreno-Brid, Juan Carlos y Jaime Ros, "México: las reformas del mercado desde una perspectiva histórica," in *Revista de la Cepal*, No.82, 12/2004.
- Moreno-Brid, Juan Carlos y Jaime Ros, *Growth and Development in the Mexican Economy: A Historical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Nueva York, en prensa.
- Moreno-Brid, Juan Carlos, Juan Carlos Rivas y Jesús Santamaría,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in Mexico after Nafta: The Road Traveled," in *Development and Change*, Vol.36, No.6, 11/2005.
- Reyes, Andriana, "La crisis en la óptica de Carstens," in *Ejecutivos de Finanzas*, No.73, 2009.
- Reyes heróles, Federico y Francisco Suárez Dávila, "Presentación de 'La crisis: testimonios y perspectivas'," in *Este País*, No.214, 1/2009.
- Ruiz, Jonathan y Gustavo de la Rosa, "Caerá 4% el PIB: J.P. Morgan," in

Sección Negocios, *Reforma*, 28/2/2009.

Secretaría de Hacienda y Crédito Público de México (SHCP), *Informe Trimestral sobre la Situación Económica, las Finanzas Públicas y la Deuda Pública*, cuarto trimestre de 2008, México, 2009.

Secretaría de Hacienda y Crédito Público de México (SHCP), *Información de finanzas públicas y deuda pública enero-diciembre de 2008*, México, 2009.

Werner, Alejandro, "Perspectivas económicas para 2009 y el Acuerdo Nacional en Favor de la Economía Familiar y el Empleo," presentación ante la Comisión de Hacienda y Crédito Público de la Cámara de Diputados, 2009. 2. 11.